

주간 통일정세

2016-07

Contents

I. 북한동향

1. 핵문제 및 외교
2. 대내 정치
3. 경제
4. 사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북, 美 대북제재법 발효후 첫 공식반응…“가소롭다”(2/20,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0일 담화에서 최근 공식 발효된 미국의 대북제재법안에 대해 “가소로운 짓”이라고 비난함.
 -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보다 가증될수록 우리 역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더욱 높이 추켜들고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힘.
 - 대변인은 “미국은 이번에 대조선정책의 본질이 우리 인민경제 전반을 질식시키고 체도를 붕괴시키자는 것이라는 것을 공공연히 드러내놓았다”며 “이는 미국의 적대시정책의 도수가 한계점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준다”고 주장함.

나. 주요 매체 논평

- 北 노동신문 “美 푸에블로호 돌려줄 수 없다”(2/2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0일 개인 필명의 논평을 통해 “얼마 전 푸에블로호와 이름이 같은 마을이 있는 콜로라도주의 의회에서 무장간첩선의 송환을 요구하는 결의가 채택되었다”면서 “미국이 푸에블로호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동을 피워도 거기서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밝힘.
 - 논평은 “우리 령해(영해)에 기어들어 정탐행위를 하다가 몰수된 전자첨보 장비와 기밀문서는 물론 나포된 푸에블로호는 우리의 전리품이므로 그것은 절대로 돌려줄 수 없다”면서 “전리품의 처분권은 승자에게만 있는 법”이라고 강조함.
 - 이어 “우리는 나포한 푸에블로호를 전시해 놓고 후대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은 우리가 미국놈들에게서 로획한(노획한) 무장간첩선이라고 승리자의 긍지를 안고 자랑스럽게 말해주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의 자주권을 한 치라도 침범하는 자들을 주체 조선의 존엄을 걸고 짓밟개 버릴 것”이라고 덧붙임.

■ 北 “핵보유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 주장(2/21,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21일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자면’이란 글에서 “무력행사에 의거해서는 북남 사이에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을뿐 아니라 민족전체를 헤아릴 수 없는 재난 속에 빠뜨리게 된다”며 무력 사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힘.
- 하지만, ‘조선의 오늘’은 이날 ‘자위적 국방력 강화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란 글에서 “우리 공화국(북한)의 강력한 전쟁 억제력은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자위적 권리”라고 주장함.
- 이 매체는 “미국은 남조선에 대대적인 침략무력을 끌어들이고 핵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공화국을 겨냥한 핵전쟁 연습을 매일과 같이 광란적으로 벌리었다. 하여 우리 공화국은 나라의 안전과 최고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핵억제력을 갖추게 되었다”며 북한의 핵보유가 “미국의 뿌리깊은 대조선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고 설명함.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초강경 첫 美 대북제재법 공식 발효…오바마 서명(2/19, 연합뉴스)

- 백악관은 19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대북제재법안(H.R.757)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히면서, 북한만을 겨냥한 사상 첫 미국의 대북제재법이 18일(현지시간) 공식으로 발효됐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함.
- 북한만을 겨냥한 대북제재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 정부는 언제든 북한에 대해 한층 강력한 독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뉴스는 설명함.
- 미국 상·하 양원이 서둘러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이어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5~16일 캘리포니아 주(州) 서니랜즈에서 열린 미-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돌아오자마자 신속히 서명한 것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도발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뉴스는 덧붙임.

- **美, 대북 정보유입 대폭 강화…“느리지만 분명히 통제약화”(2/20, 연합뉴스)**
 - 톰 말리노프스키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담당 차관보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북한 인권과 안보의 결합’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 사회에 정보를 더 빠르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함.
 - 말리노프스키 차관보는 “북한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민들이 다른 삶의 대안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끔 관리해온 전체주의 국가”라며 “우리는 대북 정보 유입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노력을 계속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함.
 - 말리노프스키 차관보는 “DVD나 MP3, 휴대폰, 태블릿이 북한에서 가용한 상황”이라며 “한국의 드라마와 외국영화는 김정은 정권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지를 확인시켜줄 것”이라고 밝힘.

- **北 관영매체 “미국서도 김정일 생일 경축 음악회”(2/2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1일 ‘광명성절(김정일 생일, 2월 16일) 경축 음악회 미국에서 진행’이란 글에서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탄생 74돌에 즈음하여 재미동포 예술인들과 미국 예술인들이 함께 출연하는 경축 음악회 ‘2월의 봄’이 13일 미국 뉴욕시 맨해튼의 머르킨 극장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고 보도함.
 - 이어 “음악회는 우륵교향악단 단장 리준무가 지휘하는 관현악 ‘승리의 길’로 시작되었다”며 “각 계층 재미동포들과 유엔주재 조선상임 대표부 성원들, 유엔주재 여러 나라 외교관들, 미국인들이 음악회를 관람하였다”고 전함.
 - 그러면서 통신은 “위대한 사상과 탁월한 영도로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세계의 정상에 올려 세워주신 절세 위인들의 혁명생애가 어려웠고 시련의 천만산악 해쳐 넘으며 역사의 돌풍 속에서 더욱 역세여지는 강용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억척불변의 혁명신념이 맥박치는 관현악은 관람자들의 심금을 울려 주었다”고 주장함.

마. 대중국

- **“중국주재 北외교관 음주운전 중국인 3명 사망”(2/19,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의 장거리로켓(미사일) ‘광명성호’ 발사를 자축하며 술을 마신 중국 주재

- 북한 외교관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중국인 3명을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보도함.
- 방송에 따르면 중국 단둥(丹東)의 주민 소식통은 “지난 7일 단둥 주재 북한 공관원들과 고위급 주재원들이 한데 모여 광명성 4호 발사 성공을 자축하는 모임이 있었고 모임이 과하자 만취 상태의 영사가 무리하게 운전을 하다가 일으킨 사건으로 단둥 시민들이 분개하고 있다”고 밝힘.
 - 단둥 현지의 또 다른 소식통은 “이 사고를 일으킨 영사는 사망자 1인당 50만 위안씩 150만 위안(2억8천300만 원 상당)이라는 거액을 배상해야 하는 처지에 몰려 있다”면서 “돈을 마련할 길이 없는 영사와 그가 소속된 선양 총영사관 단둥 지부에서는 산하 무역주재원을 상대로 강제 모금을 하고 있어 주재원들의 원성까지 사고 있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함.

바. 대일본

■ 일본, 북한여자축구팀에 입국 특별허용 시사(2/19, NHK)

-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일본 관방 부(副)장관은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올림픽 여자축구 예선전에 참가할 북한 선수단의 입국을 허용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NHK가 19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하기우다 부장관은 이날 도쿄에서 열린 강연에서 “아직 정식으로 입국시킨다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신청이 있으면 당연히 입국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 일본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북한에 적(籍)을 둔 인물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선수단은 특별 입국을 인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매체는 전함.

사. 대러시아

■ 러시아 “개성공단 폐쇄 등 대북 양자 제재에 반대”(2/19, 연합뉴스)

- 러시아가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등 북한에 대한 관련국들의 양자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9일 보도함.
-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시내 외무부

- 청사에서 한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한국 정부가 취한 개성공단 폐쇄와 미국이 추진 중인 대북 제재 등 관련국들의 양자 제재와 관련 러시아도 북한과의 합작 경제 프로젝트 중단 등으로 동참할 수 있는가’란 연합뉴스의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표시함.
- 이어 자하로바는 “어떤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방적 제재 형태로 취해지는 특정 국가에 대한 모든 압력은 불법적”이라면서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취하는 제재만을 인정한다”고 강조함.

아. 국제기구

- ITU, 北에 강력한 경고 서한 발송…“사전 정보 제공안했다”(2/17, 연합뉴스)
 - 국제적으로 무선주파수와 위성 궤도 등을 관리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위성을 발사했다고 주장하는 북한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연합뉴스는 17일 보도함.
 - 산제이 아차라 ITU 대변인은 17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프랑수아 랑시 ITU 전파총국장 명의로 북한 김광철 체신상에게 15일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현 상황을 극히 우려하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Extremely concerned and alarmed)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고 말함.
 - 이어 그는 “ITU 규정에 따라 위성을 발사하려는 국가는 주파수 등 기술적 요건을 사전등록해 회원국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북한에 관련 정보 제공을 거듭 촉구했으나 반응이 없어 이번에 강도 높은 서한을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 자금세탁방지기구 “북한과 거래에 특별한 주의 권고”(2/21, 연합뉴스)
 -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19일(현지시간) 세계 36개 회원국에 대해 북한 기업 및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권고함.
 - FATF는 성명에서 회원국들에 대해 “2011년 2월 25일 촉구한 내용을 재확인한다”면서 “북한 기업·금융기관 등 북한과의 거래 및 사업관계에 대해 특별한 주의(special attention)를 기울이도록 회원국이 자국 금융기관에 권고하라는 것”이라고 밝힘.
 - 특히 “외환결제를 제후한 은행망이 이러한 대응조치를 우회하거나 피해나가는

데 이용되지 않도록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회원국은 자국 내에 자회사·지점을 열겠다는 북한의 요구를 검토할 경우,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위험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밝힘.

자. 기타 국가

■ 특이사항 없음.

- 주북 외교단과 무관단, 2월 15일 김정은에게 꽃바구니와 축하편지 전달(2.15, 중앙통신·중앙방송)
- 팔레스타인 대통령·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조선과의 친선협회 위원장 등, 2월 15일 김정은에게 각각 꽃바구니 전달(2.15, 중앙통신·중앙방송)
- 러시아 21세기 관현악단·중국 항일혁명투쟁 연고자 후보중의 딸 주위 가족·공화국영웅 안동수 유가족 정일심 동포 등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 2월 15일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꽃바구니 진정(2.15, 중앙통신)
- 러시아연방 공산당 대표단(단장 : 카즈베크 타아사예브 당중앙위 비서), 2월 15일 평양 도착(2.15,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현환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사무총장, 2월 14일 평양 도착(2.15, 중앙통신)
- 재일본조선 상공연합회 상임이사회·금강산가극단 등 「총련」 조직들과 단체들, ‘김정일 생일’ 즈음 김정은에게 ‘건강 축원’ 축전(2.16, 중앙통신)
- 김영남, 2월 17일 재일본조선인예술단과 평양대극장에서 담화(2.17, 중앙통신·중앙방송)
- 최태복(黨 비서), 2월 17일 러시아 공산당 대표단(단장: 카즈베크 타아사예프 黨 비서)과 담화(2.17, 중앙통신·중앙방송)
- 리수용(외무상), 2월 15일 모리타니이슬람공화국 외무 및 협조상으로 임명된 ‘이쌀쿠 울두아흐마드 이지드 비흐’에게 축전(2.17, 중앙통신)
- 조선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여성회의, 2.7~11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진행(2.17, 중앙통신)
- 주북 이란 대사관, 2월 18일 自國 이슬람 혁명 37주년에 즈음하여 리수용(외무상) 등을 초대한 가운데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연회 마련(2.18, 중앙통신·중앙방송)
- 나이지리아·우간다 대통령과 멕시코 전국지도자, 김정일 생일(2.16)에 즈음하여 김정은에게 각각 축전(2.18, 중앙통신)
- ‘조선과의 친선협회대표단’, 과학기술전당·제20차 김정일화 축전장·미래과학자거리 등 참관(2.18, 중앙통신·중앙방송)
- ‘제24차 광명성절 경축 백두산상 국제피겨축전’ 참가 러시아·라트비아·벨라루스·캐나다 선수들, 2월 18일 귀국(2.18, 중앙통신·중앙방송)
-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관련 “국제관례에 의하면 영토에 관한 영유권은 그것을 먼저 발견하고 이용한 측에 부여되게 되어있다”며 “독도는 신성불가침의 조선영토”라고 강조(2.19,

중앙통신·민주조선)

- 韓日 ‘위안부 합의’ 관련 “일본군 성노예 범죄는 국가가 진심으로 인정하고 사죄하며 전면적으로 배상할 때에만 해결될 수 있다”며 ‘對日 투쟁 전개’ 강조(2.19, 중앙방송)
- 주북 러시아 대사(알렉산드르 마체고라)와 대사관 무관, 2월 19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러시아의 ‘조국 수호자의 날’ 즈음 연회 개최 및 노광철(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등 초대(2.19, 중앙통신·중앙방송)
- 러시아 공산당 대표단(2.15, 평양 도착), 2월 19일 귀국(2.19,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교육위 - 쿠바 고등교육성, 2월 19일 아바나에서 교육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에 관한 합의서 조인(2.20, 중앙통신)
- 중국 길림성 교향악단(인솔: 중국 길림성 문화청 부청장 소위), 2월 20일 평양 도착(2.20, 중앙통신·중앙방송)
- 중국 연변만행상무 유한공사대표단·중국 상해성조문화전파 유한공사대표단·중국 베이징송장환구 공예품 유한공사대표단, 2월 20일 평양 출발(2.20, 중앙통신)
- 재중조선인총연합회 축하단(단장: 최수봉 의장)·중국 단둥시 조선족경제문화교류협회대표단(단장: 김택룡회장), 2월 20일 평양 출발(2.20, 중앙통신·중앙방송)
- 재일조선인예술단(단장: 장기생)·조선과의 친선협회대표단, 2월 20일 평양 출발(2.20,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일 생일(2.16) 경축 음악회(재미동포 예술인들과 미국 예술인들 출연), 2월 13일 미국 뉴욕市에서 진행(2.21, 중앙통신)
- 여러 나라 각계 인사들(네팔 공산당 총비서·방글라데시 사회주의당 총비서·영국 신공산당 총비서 등), 2월 5일부터 16일 김정일 생일(2.16)에 즈음하여 自國 주재 北 대표부 축하방문(2.22, 중앙통신)
- 방북 중국 길림성 교향악단, 2월 21일 해당 부문 일꾼을 통해 김정은에게 꽃바구니 전달(2.21, 중앙통신·중앙방송)

2.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 北 김정은 “주체조선의 실용위성 더 많이 쏘아올려야”(2/15,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 13일 ‘광명성4호’ 발사에 기여한 관계자들을 위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주최로 평양 목란관에서 열린 환영 연회에서 “과학연구사업에 총매진해 앞으로 주체조선의 실용위성들을 더 많이 쏘아올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함.
- 부인 리설주와 함께 연회에 참석한 김 제1위원장은 축하연설에서 “적대세력들이 어느 때보다도 우리를 질식시키려고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는 복잡한 정세

속에서 당 제7차 대회를 눈앞에 두고 나라의 운명과 조국의 존엄을 걸고 지구관측위성을 발사할 것을 결심한 것은 진짜배기 애국자, 우리 당에 충실한 붉은 과학전사들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함.

- 이어 그는 “동지들의 불같은 애국 충정의 구슬땀은 그대로 연료가 되고 추진력이 되어 주체위성이 0.001mm의 편차도 없이 정확히 우주에 솟구쳐올랐다”고 평가했다고 통신은 전함.

■ **北 김정은 “위성발사 국제적 신뢰·협조 증진해야”(2/19,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우주개발사업과 관련한 대외 활동을 활발히 벌여 평화적인 우주과학 연구와 위성발사 분야에서 국제적인 신뢰를 증진시키고 협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지난 17일 ‘광명성4호’ 발사에 기여한 관계자를 대상으로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노동당 및 국가 표창 수여식 축하 연설에서 이같이 지적했다고 통신은 전함.
- 그는 “미래의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의 주동력으로 되는 광활한 우주에로의 진출은 우리의 전략적 목표”라며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우주개발사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그는 “노동당 제7차 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는 데서 우주과학부문이 기치를 들고 나가야 한다”며 그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제시했다고 통신은 전함.

■ **北김정은 ‘평양사수’ 기동훈련 직접 지휘…비행훈련도 참관(2/2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방향전방지휘소에서 쌍방실동(기동)훈련을 지도하시며 다른 2개 방향에서의 훈련은 영상표시장치를 통하여 료해(이해)하시었다”고 21일 보도함.
- 통신은 “(훈련이) 혁명의 수도 평양을 적들의 그 어떤 침공으로부터도 믿음직하게 사수하기 위한 작전준비를 더욱 완성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고 덧붙였다으며 제91수도방어군단 예하 부대들이 방어전투임무를, 제105탱크사단, 제425기계화보병사단, 제815기계화보병사단 예하 부대들은 공격전투임무를 각각 맡은 것으로 전해짐.

- 통신은 별도의 기사를 통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군부대, 제447군부대, 제458군부대의 ‘검열비행훈련’을 참관했다고 전했으며 두 훈련 참관에는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리명수 총참모장, 림광일 작전총국장, 조남진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등이 함께 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北, 리설주 4개월 만에 공개활동…한복 차림 등장(2/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지난 13일 평양의 대형 연회장인 목란관에서 열린 ‘광명성4호’ 발사에 기여한 관계자들을 위한 연회 소식을 전하며 김 제1위원장이 리설주와 함께 참석했다고 15일 보도함.
 - 리설주가 북한 매체의 공개 행사 보도에 나온 것은 지난해 10월 19일(보도시점)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청봉악단의 공연 이후 120일 만임.
 - 신문에 게재된 이날 연회 사진을 보면 리설주는 빨간색 저고리에 검은색 치마로 이뤄진 한복을 입은 것으로 전해짐.
- **北, 리명수 총참모장 임명 공식 확인…처형된 리영길 후임(2/21,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리명수 전 인민보안부장이 처형된 리영길의 후임으로 우리의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총참모장에 임명된 사실이 21일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21일 전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쌍방기동훈련 참관 소식을 전하면서 리명수를 ‘조선 인민군 총참모장인 육군 대장 리명수 동지’라고 호칭했으며 통신은 김 제1위원장의 비행훈련 참관 소식을 전하는 별도의 기사에서도 “총참모장인 육군 대장 리명수 동지가 (김 제1위원장과) 동행했다”고 보도함.
 - 지난 9일 총참모장의 교체 가능성이 제기된 이후 북한 매체가 리명수가 총참모장에 임명됐음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리영길의 후임으로 총참모장에 임명된 리명수는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국장, 우리의 경장철장에 해당하는 인민보안부장 등을 지냈다고 뉴스는 덧붙임.

다. 공식 행사

- 북한 “지난 19년간 김정일화 축전장 찾은 인파 750여만 명”(2/15, 조선의오늘)
 - 지난 19년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2월 16일)을 맞아 열린 ‘김정일화축전’을 찾은 인파가 750만 명을 넘는다고 ‘조선의 오늘’이 15일 주장함.
 - 매체는 이날 “축전 참가 단위수는 1천400여 개, 축전장을 찾은 각계층 인민들과 해외동포들, 외국인들의 수는 750여만 명에 달한다”고 밝힘.

- 北, ‘김정일화 축전’ 행사장에 KN-08 모형 내세워(2/20,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20일 ‘20차 김정일화 축전장을 찾아서’라는 약 12분 길이의 동영상을 통해,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을 기념하기 위한 ‘김정일화 축전’ 행사장에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의 모형을 등장시켰다고 전함.
 - 이 영상에는 북한이 지난 7일 발사한 ‘광명성호’와 2012년 발사한 ‘은하3호’의 모형 외에도 이동식 ICBM인 KN-08의 초기 모형과 탄두 형태가 개량된 모형이 나오는데, 탄두 형태가 뾰족한 KN-08은 북한이 지난 2012년 4월15일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 기념 열병식 때 처음 공개한 이동식 ICBM이며, 둥근 형태로 개량된 것은 3년 뒤인 지난해 10월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 때 공개한 미사일임.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北, 김정일 생일맞아 우상화…대를 이은 충성 독려(2/16, 조선중앙방송)
 - 북한은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을 맞아 김 위원장을 찬양하고 아들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향한 대를 이은 충성을 독려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은 보도함.
 - 방송은 이날 오전 “뜻깊은 2월 명절 광명성절이 왔다”며 “민족사적인

대사변들로 민족 최대의 명절 광명성절을 끝없는 환희와 무한한 걱정 속에 맞이한다”고 보도함.

- 방송은 “제국주의 연합 세력의 고립압살책동과 전쟁도발 책동을 선군의 보검으로 호되게 후려갈기시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하고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셨다”고 김정일을 찬양함.

■ ”호칭만 1천200개“…북한, 김정일 생일 맞아 우상화 가열(2/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6일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분출’이란 글에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걸출한 위인상은 역사에 전무후무한 수많은 호칭들로 더욱 빛나고 있다”며 “위대한 장군님(김정일)을 칭송한 호칭은 지금까지 공개된 것만도 무려 1천200여 가지에 달한다”고 주장함.
- 이들 가운데 김 위원장을 태양으로 높이 칭송해 부른 호칭은 ‘인류의 태양’, ‘혁명의 태양’, ‘삶의 태양’, ‘희망의 태양’, ‘향도의 태양’, ‘주체의 태양’, ‘사회주의의 태양’, ‘선군 태양’ 등이라고 신문은 소개함.
- 이어 “위인중의 위인, 정의의 수호자, 사랑의 최고 화신, 세련되고 탁월한 정치가, 희세의 대성인 등 그 많은 호칭들을 담기에는 우리의 지면이 모자란다”며 김정일을 한껏 치켜세움.

■ 北 노동당, 공동구호 발표…“위성 더 쏘아올리라”(2/1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오는 5월 노동당 제7차 대회를 앞두고 ‘공동구호’를 발표해 국방과 과학 등 각 분야에서 성과를 낼 것을 독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함.
-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는 당 제7차 대회에 즈음해 “올해 강성국가 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 등 공동구호 약 350개를 발표했다고 통신은 전함.
- 노동당은 이번 공동구호에서 ‘수소탄시험에서 성공한 그 기세로 올해의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자’, ‘주체조선의 위성을 만리창공에 더 많이 쏘아올리라’ 등 최근의 제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주요 성과로 부각시킴.

- 김정일 생일(2.16) 74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2월 15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2.15, 중앙방송·중앙통신)
- 국가우표발행국, 김정일 생일을 맞아 새 우표들(개별우표 4종) 발행(2.15, 중앙통신)
- ‘광명성 4호 발사의 완전성공은 민족의 존엄과 긍지, 지혜와 재능을 만방에 떨친 전민족적인 경사’라며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량이 오늘처럼 최고의 경지에 오른적은 일찍이 없었다’고 주장(2.15,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정은 黨 제1비서, 2월 16일 ‘김정일 생일’ 즈음 리설주와 함께 금수산태양궁전 방문 참배(2.17, 중앙방송)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33호(2.11字), 선교은하피복공장 재단직장 등 19개 단위에 [3대혁명 붉은기] 수여 결정(2.16, 중앙방송)
- 김명남·박봉주·김기남(연설) 등 당과 국가·군대의 책임일꾼들 참가 및 주북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 부부·무관 부부 등 초대된 가운데 2월 16일 인민문화궁전에서 경축 연회 진행(2.16, 중앙통신·중앙방송)
- 미사일(광명성-4호) 발사에 기여한 성원들의 생일축하모임, 2월 17일 4.25여관에서 진행(2.17, 중앙통신)
- 제24차 광명성절경축 백두산상 국제피겨축전 폐막식, 2월 17일 리종무(체육상, 폐막사)등이 참가한 가운데 빙상관에서 진행(2.17, 중앙통신·중앙방송)
- 박봉주(내각총리), 흥남비료연합기업소·2.8비날론연합기업소·용성기계연합기업소 현지요해(2.18, 중앙통신)
- 국립연극극장, 연극 ‘이순신 장군’ 공연 진행(2.18, 중앙통신)
- 김정일 생일(2.16) 경축 왕재산예술단 청봉악단 공연, 2월 18일 봉화예술극장에서 폐막(2.18, 중앙통신)
- 전체 인민들의 ‘공동구호(※당 중앙위·당 중앙군사위 공동구호, 2.17 발표) 관철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며 승리의 5월을 향해 총돌격, 총매진’ 독려(2.19,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정일 저작 발표(‘74.2.19) 즈음 ‘김정일의 전당과 온 사회의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사상적 일색화 실현 영도력’ 칭송 및 “당 사상 사업은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데로 지향되어야 한다”고 강조(2.19, 중앙통신·노동신문)
- 미사일 ‘광명성-4호’ 발사 기여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 합동 축하공연, 2월 18일 평양에서 진행(2.20,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선혁명박물관을 새롭게 꾸리는 사업에 적극 기여한 근로자들(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 실장 리종혁 등 7명)에게 ‘감사’ 전달(2.21, 중앙방송)

3.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다. 경제 상황

- “北 20년간 전력·음식업체 늘고, 중화학 줄었다”(2/19, 연합뉴스)
 - 지난 20년간 북한에서는 전력 및 음식료품 분야 기업체 수가 크게 늘어난 대신 중화학공업 분야가 상당히 위축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연합뉴스가 19일 보도함.
 - 19일 산업연구원의 ‘북한 산업분야 기업들의 변화 실태 분석 및 최근 북한 산업정책 방향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전력공업 분야 기업 수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995년 3.4%에서 2015년 9.3%로 크게 늘었으며, 이 기간에 음식료품 가공업 기업 비중도 13.7%에서 18.1%로 증가했다고 전함.

라. 대외 경제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원산수산대학에서 제작한 “이동식 물고기 알 깨우기 장치” 도입 등 ‘양어부분의 새 기술혁신안들 도입으로 양어의 과학화·집약화 실현’ 선전(2.19, 중앙통신)
- 北, ‘각지에서 양어열풍이 경쟁적으로 일어번지고 있다’며 평안남도에서 화력발전소의 퇴수를 이용한 메기공장건설 목표를 세우고 공사에 착수했다고 보도(2.20, 중앙통신)
- 北, ‘각지에서 양어 열풍이 경쟁적으로 일어번지고 있다’고 보도(2.21, 중앙방송)

4.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北, 외교관 출신 고영환씨 암살 지령…탈북민 경호 강화(2/19, 연합뉴스)

- 경찰과 정보 당국은 북한 정찰총국이 외교관 출신 탈북민인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암살 지령을 내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고 부원장에 대한 경호를 강화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함.
- 고 부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찰로부터 구체적인 첩보가 입수됐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에 따라 경호 인원이 평소 2명에서 8명으로 늘었다”고 말했다고 전함.
- 또한 경찰은 최근 테러 가능성이 있는 국내 탈북 인사에 대한 경호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뉴스는 보도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마. 사회 동향

■ 北 인민과학자 로정완 사망…김정은, 조화 보내(2/1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인민과학자인 로정완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수가 사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함.
- 통신은 이날 그의 사망일자는 밝히지 않은 채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인민과학자, 교수, 박사인 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사 로정완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14일 고인의 영전에 화환을 보내시었다”고 전함.

■ 북한, 평양에 ‘차량홀짝제’ 도입…“교통체증? 석유부족?”(2/16, 워싱턴포스트)

-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북한 거주자와 방문객 등을 인용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연초부터 평양 시내 차량을 번호판에 따라 홀짝으로 나눠 번갈아 운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함.
- 북한 언론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교통체증과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단 정부나 고위급 인사의 차량, 군용 차, 외국인 차량, 24석 이상의 버스 등은

예외라고 전함.

- 북한이 평양에 차량 홀짝제를 도입한 배경을 놓고 교통 체증 또는 석유 부족 등 여러 관측이 제기되고 있음.

■ 北 노동신문 인터넷 한때 접속 불가...“사이버공격 가능성도”(2/16, 연합뉴스)

- 노동신문의 웹사이트 인터넷 접속이 16일 한동안 되지 않았으며, 관영 조선중앙통신의 인터넷 접속도 한때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16일 보도함.
- 노동신문 인터넷 웹사이트는 오전부터 접속되지 않다가 오후 5시경부터 정상적으로 가동됐으며, 중앙통신의 접속도 이어졌다 끊어지기를 반복하다 같은 시간대부터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뉴스는 전함.
- 한편 북한의 공식 도메인 ‘kp’를 사용하는 김일성종합대학과 내나라, 민족대단결 등의 웹사이트 접속은 원활하게 이뤄졌으며, ‘kp’ 도메인을 쓰지 않고 중국에 서버를 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등은 접속이 수월했다고 보도함.

- 홍순광(보건성 국가위생검열원), ‘지카 바이러스’ 차단 위해 “국경 검역기관들이 해당 감염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과 화물 검역” 등 ‘지카 바이러스 차단 위생방역·검역사업’ 전언(2.19, 중앙통신)

© 북한연구실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북한, ‘미사일 발사 성공’ 詩로도 자축(2/14, 연합뉴스)**
 -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경축 분위기를 이어가는 북한이 시(詩)로도 ‘발사 성공’을 자축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4일자에는 미사일 발사를 축하하거나 이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치적으로 찬양하는 시 3편이 한꺼번에 실렸음.
 - 앞서 북한은 미사일 발사 다음날인 지난 8일 발사 성공을 기념하는 불꽃놀이 행사를 개최하고 지난 10일에는 평양시민 수십만 명을 동원해 미사일 발사에 관여한 인물들의 평양 입성을 환영하는 등 경축 분위기를 내었음.
- **38노스, 북한, 사전징후 거의 없이 추가 핵실험 가능(2/17, 연합뉴스)**
 -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지하에 여러 개의 땅굴을 파 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사전 징후를 거의 보이지 않은 채 추가로 핵실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의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16일(현지시간) 우려함.
 - 분석을 담당한 잭 류 연구원은 풍계리 핵실험장 부근을 지금까지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검토한 결과 “이미 완성된 터널들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북한 지도부의 결정이 내려지면 핵실험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음.
 - 또한, 그는 핵실험장 북쪽 갭도 입구에서 일부 변화가 나타났지만, 이는 “지난달 6일 핵실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진의 활동이거나 새로운 핵실험에 대비한 활동일 수도 있으며, 혹은 방사성물질 유출을 막고자 갭도를 봉쇄하는 작업일 수도 있다.”고 설명함.
- **北 노동당, 공동구호 발표…위성 더 쏘아올리라(2/18, 연합뉴스)**
 - 북한이 오는 5월 노동당 제7차 대회를 앞두고 ‘공동구호’를 발표해 국방과 과학 등 각 분야에서 성과를 낼 것을 독려함.
 -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는 당 제7차 대회에 즈음해 “올해 강성국가 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 등 공동구호 약 350개를 발표했다고 조선중앙

통신이 18일 보도하였음.

- 북한이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통일 등 모든 분야가 총망라된 구호를 발표함에 따라 향후 북한 전역에서 구호 관철 쫓기모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日방위상, 北핵무기 탄두화 가능성…과신에 빠지면 도발 더할 것(2/18, 연합뉴스)**

-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통해 미사일 기술 전반을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함.
- 그는 지난 16일 이뤄진 연합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의 이런 움직임이 자국은 물론 동북아와 국제 사회에 큰 위협이 되며 한국, 일본, 미국이 일치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나카타니 방위상은 한국과 일본이 직접 군사 정보를 교환하고 군수품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또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양해를 얻어야 하는 지역을 휴전선 남쪽이 아닌 한반도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짐.

■ **美친북매체, 北 산탄기술 개발…사드 별 소용 없어 주장(2/19, 연합뉴스)**

- 미국의 친북 매체가 19일 북한이 산탄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한국이 중·단거리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해도 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함.
- 미국의 친북 웹사이트 ‘민족통신’을 운영하는 노길남 대표는 이날 평양발 기사에서 “조선은 이미 산탄 기술을 개발해 놓았기 때문”에 “미국의 사드를 한국 당국이 비싼 값으로 사들여도 실제로는 별 소용이 없는 것으로 진단된다.”고 밝힘.
- 그러면서 ‘광명성 4호’의 1차 추진체가 270여 개의 파편으로 분리돼 서해상에 떨어진 것도 산탄 기술 때문이라며 “(한국 당국이) 그 동체를 수거해 조선의 위성개발 수준의 한 부분이라도 알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언급함.

■ **美관리, 북한이 쏘아올린 위성 또다시 궤도에서 회전(2/19, 연합뉴스)**

- 북한이 발사한 ‘광명성 4호’ 위성이 잠시 안정화됐다가 다시 궤도에서 불안정하게 회전하는 ‘텀블링(Tumbling)’ 상태로 돌아갔다고 미 정부 관계자와

정통한 소식통이 18일(현지시간) 말했다.

- 광명성 4호는 지난 7일 로켓 '광명성호'에 실려 발사된 이후 궤도에 진입하는데 성공했지만, 이후 텀블링 상태에 빠져 지구와의 교신은 실패한 것으로 추정됨. 북한의 위성은 궤도에 진입한 이후 안정과 불안정을 오가며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제 기능을 하지 못했음.
- 한편, 한국과 미국 등 주변국은 광명성호 발사를 미사일 시험이라고 보고 있지만, 북한은 지구관측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임.

■ 北, 핵보유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 주장(2/21, 연합뉴스)

- 북한이 매체를 통해 '무력행사로 남북문제를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면서도 핵무기 개발 및 보유에 대해선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권리'라고 주장했다.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운영하는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1일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자면'이란 글에서 "무력행사에 의거해서는 북남 사이에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민족전체를 헤아릴 수 없는 재난 속에 빠뜨리게 된다."며 무력 사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힘.
- 하지만, 북한은 자체 개발해 보유한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는 상반된 주장을 폈음. 북한 대외 선전용 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이날 '자위적 국방력 강화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란 글에서 "우리 공화국(북한)의 강력한 전쟁 억제력은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자위적 권리"라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남.

■ 北 김정은, 한달 보름만에 軍훈련 참관·추기도발 노리나(2/21, 연합뉴스)

-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제4차 핵실험 도발 이후 처음이자 한 달 보름 만에 군(軍) 훈련을 참관함에 따라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2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은 제91수도방어군단과 제105 탱크사단, 제425기계화보병사단, 제815기계화보병사단의 예하 부대들이 참가한 쌍방기동훈련을 직접 참관·지휘한 것으로 알려짐.
- 이번 기동훈련은 미군의 잇따른 전략무기 한반도 출동과 오는 3월 실시될 한미 키 리졸브(KR) 연합훈련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임. 조선중앙통신이 훈련의 목적에 대해 수도권인 '평양을 적들의 침공으로부터 사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함.

나. 미·북 관계

- **北매체, 한미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은 선전포고 주장(2/15, 연합뉴스)**
 - 북한 매체가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을 “선전포고”라고 비난함.
 - 북한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15일 ‘북침 핵전쟁 연습 소동은 곧 자멸의 길이다.’란 글에서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의 강행은 우리에게 대한 노골적인 선전포고이며 불피코(반드시) 북남관계를 핵전쟁 발발의 문어귀에로 바짝 몰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그러면서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남조선 당국이 시대착오적인 대결 정책을 버리고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할 것을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다.”며 “만약 도발자들이 우리의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추후도 용납하지 않고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 대답할 불타는 보복의지로 충만되어 있다.”고 위협하였음.
- **미국-아세안 정상회의美서 개막…北-中 동시압박에 초점(2/16, 연합뉴스)**
 - 미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회원국 간 정상회의가 15일(현지시간) 오후 캘리포니아 주(州) 휴양지 서니랜즈에서 이틀 일정으로 개막하였음.
 - 이번 회담에서는 미·중 양국이 첨예한 대척점에 선 북한 문제와 남중국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문제 등 3대 의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임.
 - 오바마 대통령은 이들 이슈에 대해 아세안 국가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른바 ‘반(反)중국 전선’ 구축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임.
- **초강경 첫 美 대북제재법 공식 발효…오바마 서명(2/19, 연합뉴스)**
 - 북한만을 겨냥한 사상 첫 미국의 대북제재법이 18일(현지시간) 공식으로 발효함. 백악관은 이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대북제재법안 (H.R.757)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음.
 - 북한만을 겨냥한 대북제재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 정부는 언제나 북한에 대해 한층 강력한 독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음.

- 미국 상·하 양원이 서둘러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이어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5~16일 캘리포니아 주(州) 서니랜즈에서 열린 미-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돌아오자마자 신속히 서명한 것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도발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평가됨.

■ **북한, 주한미군 사드 배치협의 앞두고 비난공세 고조(2/19, 연합뉴스)**

- 주한미군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려는 한미 간 협의를 앞두고 북한의 비난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 특히 배치 협의가 임박해지자 중국과 러시아까지 끌어들이 남한을 위협하며 거칠게 반응하고 있음.
- 조선중앙통신은 19일 논평을 통해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남조선은 우리 주변나라들의 제1차적 타격 대상으로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주변 나라들’은 중국과 러시아를 지칭한 것으로, 사드 배치 반대를 위해 주변국까지 끌어들이는 것임.
- 한편, 이런 논평은 미국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위한 협의에 앞서 양국 실무진이 세부사항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왔음.

■ **美, 대북 정보유입 대폭 강화…느리지만 분명히 통제약화(2/20, 연합뉴스)**

- 톰 말리노프스키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담당 차관보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북한 인권과 안보의 결합’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 사회에 정보를 더 빠르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말리노프스키 차관보는 “북한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민들이 다른 삶의 대안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끔 관리해온 전체주의 국가”라며 “우리는 대북 정보 유입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노력을 계속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그것이 유엔의 북한인권실태 보고서이건, 아니면 탈북과정을 그린 영화이건, 걸그룹인 ‘소녀시대’의 노래이건 북한에 유입시켜 북한 주민들이 이를 보고 듣게 될 것”이라며 “느리지만, 분명히 북한 정권의 장악력은 약화되고 있다.”고 강조하였음.

■ **北 노동신문, 美 푸에블로호 돌려줄 수 없다(2/20, 연합뉴스)**

- 북한은 1968년 나포한 미국 정보함 푸에블로호를 미국에 돌려줄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개인 필명의 논평을 통해 “얼마 전 푸에블로호와 이름이 같은 마을이 있는 콜로라도주의 의회에서 무장간첩선의 송환을 요구하는 결의가 채택되었다.”면서 “미국이 푸에블로호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동을 피워도 거기서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음.
- 논평은 “우리 령해(영해)에 기어들어 정탐행위를 하다가 몰수된 전자첩보 장비와 기밀문서는 물론 나포된 푸에블로호는 우리의 전리품이므로 그것은 절대로 돌려줄 수 없다.”면서 “앞으로도 우리의 자주권을 한 치라도 침범하는 자들을 주체 조선의 존엄을 걸고 짓밟개 버릴 것”이라고 덧붙임.

■ **북, 美 대북제재법 발효후 첫 공식반응...가소롭다(2/20, 연합뉴스)**

- 북한은 20일 최근 공식 발효된 미국의 대북제재법안에 대해 “가소로운 짓”이라고 비난했음.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에서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보다 가증될수록 우리 역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더욱 높이 추켜들고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음.
- 북한 당국이 미국의 대북제재법 발효 이후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변인은 “미국은 이번에 대조선정책의 본질이 우리 인민경제 전반을 질식시키고 제도를 붕괴시키자는 것이라는 것을 공공연히 드러내놓았다.”며 “이는 미국의 적대시정책의 도수가 한계점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준다.”고 주장했다.
- 이어 “제재나 위협으로는 조선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치된 견해”라며 “미국이 책동의 목표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허물어보려는 것이라는 데 대해 절대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임.

다. 중·북 관계

■ **中 관영언론들, 강력한 대북제재 필요성 시사 ‘눈길’(2/15, 연합뉴스)**

- 중국 관영 언론들이 춘제(春節·중국의 설) 연휴가 끝난 직후, 강력한 대북 제재

필요성을 잇달아 시사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음.

-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5일 사설에서 중국인의 대북 민심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이 같은 민심의 변화가 중국의 대북정책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도 이날 사설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가 아닌 (대북) 제재가 한반도 위기의 치료법”이라며 강력한 대북 제재 필요성을 강조함.
- 관영 언론들의 이 같은 보도 태도는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온 중국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음.

■ **중인터넷에 北비난글…채무불이행·지하무역 자금으로 핵실험(2/16, 연합뉴스)**

- 중국인의 대북감정이 악화하는 가운데 북한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 방법 등으로 핵실험 자금을 마련해왔다는 주장이 담긴 글이 중국 인터넷에 올라옴.
- 홍콩 봉황망(鳳凰網)과 텡쉰(騰迅) 등 중국의 일부 주요 인터넷사이트는 16일 ‘안팎으로 곤경에 직면한 조선(북한)은 어떻게 자신을 먹여 살리나’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주요기사’ 형태로 노출했음.
- 이는 중국의 대북감정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북한체제를 노골적으로 비판한 글이 중국 인터넷에 버젓이 등장하고, 더구나 주요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전파된 점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는 평가하고 있음.

■ **中, 김정일의 업적 높이 평가…북중협력에 중요한 공헌(2/16, 연합뉴스)**

- 중국정부는 16일 “우리는 김정일 동지가 생전에 중조(중국과 북한) 우호협력 관계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공헌을 한 것을 고도로 평가한다.”고 밝힘.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생일인데 중국이 북한 측에 사절을 보냈느냐’는 질문에 “2월 16일은 조선의 전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탄생 기념일”이라며 이같이 대답하며, 또 “우리는 양국 인민 간의 전통적 우의를 매우 소중하게 여긴다.”고 덧붙임.
- 한편, 현재 북한에서 열리고 있는 김정일 탄생 기념행사에 중국정부 관계자를 파견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음.

■ **중외교부장,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화재개 논의’도 포함돼야(2/17, 연합뉴스)**

-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17일 유엔안보리에서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 대북제재 결의안과 관련, “대화 재개를 위한 논의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왕 부장은 이날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과 양자회담을 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반도(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관영 신화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이같이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런 주장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제재 뿐 아니라 북한을 6자 회담으로 끌어내기 위한 방안도 담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됨.

라. 일·북 관계

- **日, 제재강화 첫조치…北에 초콜릿·쿠키 수출 한국 국적자 체포(2/18, 연합뉴스)**
 - 대북제재로 수출입이 금지된 북한에 초콜릿과 내복, 식기 등을 수출한 일본 내 한국계 수출 업자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음.
 - 교토(京都)부·가나가와(神奈川)현·시마네(島根)현·야마구치(山口)현 경찰 합동 수사본부는 18일 도쿄의 무역회사 ‘세이료쇼지(聖亮商事)’ 사장 김모(48·한국 국적)씨를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 김씨에 대한 체포는 북한이 올 들어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강행으로 일본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 제재 강화 방침을 정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음.
- **일본정부, 조선학교 보조금 차단 검토…대북 제재 일환(2/18, 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로 일본 내 조선학교 보조금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보임.
 - 18일 산케이(産經)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함.
 - 일본 문부과학성은 17일 집권 자민당 납치문제대책본부 등의 합동회의에서 이런 계획을 밝혔으며, 문부과학성은 보조금 중단을 요구하는 통지 시기나 통지문 내용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日, 北국적자 입국금지·대북송금 금지 대북제재 확정(2/19,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19일 저녁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임시 각료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강행에 따른 대북 독자 제재를 확정함.

- 이날 확정된 대북 제재는 북한 국적자나 북한 선박의 일본 입국 금지, 대북 송금 사실상 원칙적 금지 등 지난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채택된 내용들을 담고 있음.
- 대북 송금의 경우 인도적 목적으로 한 10만 엔(약 109만원) 이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했으며, 북한을 방문한 핵·미사일 관련 기술자의 일본 재입국 금지,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해당 선박 선원의 입국 금지, 자산 동결 대상 확대 등도 포함되었음.

마. 러·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기타

- 유엔 대북제재 결의 곧 채택되나…이번주 중 진전 가능성(2/16, 연합뉴스)
 -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도출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이 잇따라 강화된 대북 독자 제재를 내놓은 가운데 유엔 대북 제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과의 협상에서도 중국 측의 태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변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15일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미국과 중국이 신속하게 한다는 데 공감대가 서 있다.”며 “이번 주 중에 양측이 뭔가 일정한 단계에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함. 이 소식통은 “중국이 좀 움직이고 있다. 기존 결의안으로부터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뜻”이라며 “북한 미사일 발사의 영향인지, 계속 시간을 끌 수만은 없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미사일 발사) 이후 움직임이 있었다.”고 덧붙임.
- 북한 유엔회원국 자격정지·제명 가능할까(2/19, 연합뉴스)
 - 오준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지난 15일(미국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헌장의 원칙과 목표에 대한 존중’이라는 주제의 공개 토의에서 “유엔 가입 때의 의무를 위반한 북한이 과연 회원국이 될 자격이 있는지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힘.

- 유엔 회원국이 193개국에 이르게 된 지금까지 회원국 자격이 정지되거나 제명된 사례는 없음. 유엔헌장 2장은 회원국의 자격정지나 제명 문제를 명시하고 있는데, 2장 6조는 ‘헌장에 규정된 원칙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유엔총회가 제명할 수 있다.’고 돼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현재로서는 북한의 회원국 지위 문제가 유엔에서 공론화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추측됨. 특히 자격정지 또는 제명의 경우 모두 ‘안보리의 권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회원국 지위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임.

■ 자금세탁방지기구, 북한과 거래에 특별한 주의 권고(2/21, 연합뉴스)

-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19일(현지시간) 세계 36개 회원국에 대해 북한 기업 및 금융기관과의 거래 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권고함.
- FATF는 프랑스 파리에서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열린 연례회의 결과를 자체 홈페이지(www.fatf-gafi.org)에 발표하고 이란과 북한에 대해 주의를 요구하는 발표문을 게재했음. FATF는 성명에서 회원국들에 대해 “2011년 2월 25일 촉구한 내용을 재확인한다.”면서 “북한 기업·금융기관 등 북한과의 거래 및 사업 관계에 대해 특별한 주의(special attention)를 기울이도록 회원국이 자국 금융기관에 권고하라는 것”이라고 밝힘.
- FATF의 권고는 북한의 최근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기존의 경제제재보다 강력한 수위의 제재를 전방위로 모색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됨.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동해서 北 잠수함 격퇴훈련…美 핵잠수함 참가(2/15, 연합뉴스)

-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7천800t급)가 13일부터 15일까지 한국 동해상에서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했음.
 - 미국이 장거리 전략폭격기 B-52에 이어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한 것으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됨.
 - 이번 훈련은 북한의 잠수함 도발 위협에 대한 한미 양국 해군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잠수함 추적훈련과 자유공방전의 방식으로 진행됨.
- **국방부, 사드 배치시 北미사일 요격 최적지점 택할 것(2/15, 연합뉴스)**
 - 국방부는 15일 한미 양국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검토할 때 미국의 군사적 효용성 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음.
 -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은 한국 기준인가 미국 기준인가’라는 질문에 “미국 측 (군사적 효용성) 기준을 가장 중요시할 것”이라고 답하였음.
 - 그는 “(사드는)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최적의 지점에서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지역을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 지역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부연한 것으로 전해짐.
- **軍, 주한미군 사드, 한국 지형상 고지대서 운용할 것(2/15, 연합뉴스)**
 - 미 양국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할 경우 사드 포대는 산과 같은 고지대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짐.
 - 이는 레이더에서 방출되는 강력한 전자파가 도심 거주지역에 피해를 주고 환경을 오염시킬 것이란 우려를 감안한 조치로 풀이됨.
 - 이와 관련,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사드 레이더 앞에 6개의 발사대가)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진다.”며 레이더에 민간인이 접근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힘.
- **국방부, 사드 군사적 효용성, 한국 방어 위한 것(2/16, 연합뉴스)**
 - 국방부는 16일 주한미군에 배치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에 대해 “대한민국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밝힘.

-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기준에 관한 질문에 “대한민국 방어를 위한 군사적 효용성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답했음.
- 국방부는 한미 양국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논의할 때 군사적 효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입장으로, 문 대변인은 “사드가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한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효용성 차원에서 모든 문제를 파악하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美전문가, 美정책입안자들, 한국 핵무장론 유념해야(2/16, 연합뉴스)**

-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한국 내에서 자체 핵 무장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미국이 아시아에서 영향력과 동맹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려면 정책 입안자들이 이에 유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칼럼니스트이자 미국 워싱턴DC에 본부를 두고 있는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상근 연구원인 마이클 오슬린은 15일(현지시간) 이 신문 온라인판에 게재한 ‘한국, 핵무장으로 가는가?(Will South Korea Go Nuclear?)’라는 기고문에서 이같이 주장했음.
- 오슬린 연구원은 한국의 핵 무장론에 대해 “루비콘 강을 건넌 것은 아니겠지만, 강이 보이는 지점까지는 온 것”이라면서 미국 정책 입안자들이 이를 유념해야 하며 한번 신뢰가 손상되면 복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하였음.

■ **미국무부, 박근혜 대통령의 단호한 대북접근 지지(2/17,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한국시간으로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대북 강경 노선을 천명한데 대해 “박 대통령의 단호하고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접근법을 지지한다.”고 밝힘.
- 이는 박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한 정권이 핵 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란 발언에 대한 반응임.
- 카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보낸 논평에서 “박 대통령의 결정은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과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무시한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지적함.

- **미국방부, 한·미, 사드 배치 협의 아직 시작 안 해 반복(2/18, 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는 17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를 위한 협의를 공식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던 기존 입장을 반복함.
 - 빌 어번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에 “양국의 공동실무단이 아직 만나지 않았으며, 협의에 앞서 세부사항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힘. 또한 이어 “한·미동맹은 이런 세부사항들을 통해 ‘신속하게, 그러나 면밀하게’ 작업을 하고 있다.”며 “그래서 일정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임.
 - 이에 앞서 피터 쿡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주 내의 일정 시점에서 사드 배치를 위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방미 조태용, 훨씬 더 강력한 결의안 협의…中도 전략목표 공유(2/18, 연합뉴스)**
 -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 중인 대북 제재 결의안과 관련해 “과거에 나왔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결의안이 돼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협의를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힘.
 -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차 방미한 조 차장은 이날 워싱턴D.C. 덜레스공항에서 워싱턴 특과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도 북한의 4차 핵실험이라는 것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큰 전략적 목표를 한·미 양국과 공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 20일까지 워싱턴D.C.에 체류할 예정인 조 차장은 18일 중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북한·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를 진행하고 에이브릴 헤인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과 면담할 계획임.

- **한미, 美 증원전력 한반도 신속전개 훈련…대북 경고메시지(2/19, 연합뉴스)**
 - 한미 양국 군이 19일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을 한반도에 신속하게 전개하는 훈련을 했음. 육군은 이날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미 8군사령부가 한미 연합 전시 증원(RSOI) 훈련을 했다고 밝힘.
 -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미 증원군의 효과적인 임무 수행을 보장하는 연습을 한 것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메시지로 볼 수 있음.

- RSOI는 수용(Reception), 대기(Staging), 전방이동(Onward Movement), 통합(Integration)의 약어로, 유사시 미 증원 전력의 한반도 전개 과정을 의미함.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은 미 증원 전력의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도로 사용을 조정·통제하고 경계, 통신, 피해 복구 등의 지원활동을 할 것임.

■ **韓美, ‘압박’으로 대북정책 공식 전환…사드 협의에 조건없다(2/19, 연합뉴스)**

- 한·미 양국은 대화와 압박이라는 기존의 ‘투트랙’ 기초에서 벗어나 대북 압박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대북정책 기초를 사실상 전환했다고 정부 고위당국자가 18일(현지시간) 밝힘.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한·미간 협의는 안보와 국익의 필요성만을 기준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진행되는 미중 간의 대북 제재 논의와는 별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강조함.
- 또한, 이 당국자는 “북한의 생각과 선행을 바꾸려면 국제사회의 압박을 통해 북한이 현재의 정책을 계속하는 한 얻을 것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각인시켜야 한다는 게 한미 양국의 인식”이라고 밝힘.

■ **압박론으로 기운 美한반도세미나…통일추진이 궁극해법(2/20, 연합뉴스)**

-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주최한 한반도 세미나는 대북 압박론으로 완전히 기울어버린 ‘워싱턴 컨센서스’를 여실히 보였음.
-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대북 대화론이 자취를 감추고 초강경 압박 일변도로 미국 정책서클의 논의가 흐르고 있음을 확인시켜줬다는 평가임.
- 캠벨 전 차관보는 “우리가 ‘하나의 한국(One Korea)’이라는 통일정책을 더 논의해야 하며, 한국도 대외정책 운용에 있어 더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문하며, “미국은 이란처럼 북한에 대해 ‘핵문제만 해결하고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접근할 수만은 없다.”고 지적함.
- 마이클 그린 CSIS 연구원은 “통일정책이 반드시 정권교체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통일은 북한 정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밝힘. 특히 “통일이 남한 주도로 이뤄질 것이라는 암묵적 공감대를 넓힘으로써 정권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함.

- 오바마 행정부 2기 6자회담 특사를 지낸 시드니 사일러 국가정보국(DNI) 선임 보좌관은 “지난 수년간 오바마 행정부 당국자들은 핵무기가 없고 전쟁이 없으며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한반도를 추구한다는 입장을 정리해 왔다.”며 “행간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통일구상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라고 밝힘.

■ 로즈 미국 국무차관보 한국·일본 등 순방…사드 논의 주목(2/20,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프랭크 로즈 국무부 군비통제·검증·준수 차관보가 한국, 일본, 인도, 동남아시아 등을 순방한다고 19일(현지시간) 발표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 로즈 차관보는 1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의 일정으로 이들 국가를 방문할 예정이다. 그가 한국에서 어떤 일정을 예정하고 있는지 바로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최근 한국과 미국 사이에 논의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문제 등이 직·간접적인 의제로 다뤄질지가 주목됨.

나. 한·중 관계

■ 中, 개성공단 문제 첫 공식반응…관련국 긴장 완화조치 희망(2/15,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 문제와 관련, 관련국들이 긴장 국면을 완화할 조치를 하기를 바란다고 15일 밝힘.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한반도의 정세는 복잡하고 민감하다.”며 “우리는 유관 각방(관련국)이 조치를 취해 현재의 긴장 국면을 완화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 지난 10일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과 이에 대응해 북한이 11일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한 이후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중국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짐.

■ 中 관영언론, 사드 배치시 한국, 독립성 더 잃게 될 것 경고(2/16, 연합뉴스)

-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6일 “중한(한중)이 서로 이해해야 하며 결코 서로 협박해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같이 주장함.
- 신문은 “만약 한국에 사드가 출현하면 중국 사회는 인민해방군이 동북지역에서

강대한 군사적 배치로 대응하는 것을 반드시 지지할 것”이라면서 “그럴 경우 한국의 본토는 미중 간 군사적 배치 경쟁이 펼쳐지는 매우 민감한 지역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음.

- 이어 “이렇게 될 경우 한국은 국가적 독립성을 더 잃게 돼 대국의 게임에서 자신도 어쩔 수 없는 바둑돌로 전략하게 될 것”이라면서 “한국의 국가적 지위도 엄청난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함.

■ **중외교부장,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추진해야(2/17, 연합뉴스)**

-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17일 “중국은 반도(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동시에) 병행해 추진하는 협상방식을 제안한다.”고 말했음.
- 왕 부장은 이날 베이징(北京)에서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과 양자회담을 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 “중국은 각국과 가능한 문제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고, “이런 방식의 취지는 각국의 주요한 우려 사항을 균형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대화·담판이 도달해야 하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조속히 대화 복귀의 돌파구를 찾는 데 있다.”고 언급함.
- 이와 관련,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왕 부장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언급했다는 점을 확인하며 “(이것은) 동북아가 능히 장기적인 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비전”이라고 부연했음.

■ **중국, 사드배치 계획 철회까지 요구…반발수위 높여(2/17, 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한국과 미국이 공식 논의에 착수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계획의 철회까지 요구하며 연일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음.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 “우리는 관련국이 이 계획을 포기하기를 희망한다.”면서 “한반도의 사드 배치는 현재 긴장 국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지역의 평화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드 배치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홍 대변인은 이어 “한반도의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우리의 태도는

결연히 반대하는 것”이라면서 “이것이 중국의 국가 안전 이익을 훼손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함.

■ **중관영언론, 한반도 전쟁방지 위해 동북지방 군사배치 강화해야(2/17, 연합뉴스)**

-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7일 사설을 통해 “중국은 마땅히 한반도의 최악의 상황에 주도면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면서 동북지방 군사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함.
- 신문은 북한의 ‘체제 붕괴’를 언급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과 미국의 한반도 주변에 대한 군사적 배치 강화, 미국의 ‘외과수술식’ 타격 가능성에 관한 소문 등을 거론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질적으로 고조되고 엄중한 군사충돌의 가능성이 커지는데 대해 대다수 사람들이 동의한다.”고 주장함.
- 환구시보는 “중국이 한반도에 전쟁과 혼란이 발생하는 데 반대하는 것은 명확하지만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지가 우리 한쪽만의 노력과 의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최악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국은 동북아 방향의 군사배치를 강화함으로써 신속대응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힘.

■ **국방부, 中 사드배치 반발에 자주권 차원에서 결정할 것(2/18, 연합뉴스)**

- 국방부는 18일 중국이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논의를 철회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사드 배치 문제를 ‘자주권’ 차원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힘.
-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중국의 사드 배치 논의 철회 요구에 관한 질문에 “우리는 자주권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답하였음.
- 그는 “북한의 증대하는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조치는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며 “우리 정부와 군은 이런 입장에 기초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함.

다. 한·일 관계

■ **日아베정권, 군위안부 강제성 부정 외교 본격 시동(2/17, 연합뉴스)**

- 1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대(對) 일본 심사에서 일본 정부는 군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공식 천명함.
- 대표로 출석한 스키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외무심의관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 군(軍)이나 관헌(官憲)에 의한 강제연행을 확인하는 것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이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7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스기야마의 발언에 대한 평가를 요구받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의 합의에 입각,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사실 관계’를 말한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짐.

- 한국 정부도 지난해 한일합의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의 상호 비판을 자제하기로 했다는 점을 의식한 듯 일본 정부의 이런 태도를 이전만큼 강하게 비판하지 않고 있음. 결국 ‘반론’의 목소리가 희미한 상황에서 아베 정권의 주장이 국제사회와 일본 안에서 점점 기정사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전망이다.

■ **日학자,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없다’는 파탄난 견해(2/19, 연합뉴스)**

- 일본 내 군위안부 연구의 선구자격인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주오(中央)대 교수는 최근 발간된 일본 월간지 세카이(世界) 3월호에 기고한 ‘진정한 해결에 역행하는 한일합의’라는 제목의 글에서 아베 정권의 군위안부 강제성 부정 행보를 비판함.
- 요시미 교수는 “아베 총리는 일한합의후 ‘2007년의 (제1차) 아베 내각 각의(국무 회의) 결정에 변경은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며 “이것은 고노(河野) 담화(1993년 군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인정한 일본 정부 담화) 발표 때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미 파탄난 견해를 유지하는 것이자 고노담화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함.
- 또한, ‘파탄난 견해’라고 규정한 근거에 언급,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나타내는, '스마랑 사건' 관련 자료가 있음을 보여주는 일본 법무성의 조사결과가 당시 (일본 정부에) 제출돼 있었다는 것이 명확해졌기 때문”이라고도 지적함.

라. 미·중 관계

■ **미 7함대 사령관, 中 인공섬서 군용기 시험비행 땀 즉각 대응(2/15, 연합뉴스)**

- 동아시아와 서태평양을 관할하는 미 해군 7함대 사령관이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 인공섬에서 중국이 군용기 시험비행을 할 경우 즉각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15일 보도하였음.

- 에어쇼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조지프 오코인 미 해군 제7함대 사령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태평양 인공섬에서 중국이 전투기를 이륙시키려는 움직임은 미국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발할 것”이며, “우리는 도발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국제법에 따라 항행의 권리와 자유를 실행할 뿐이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언급함.
- 오코인 사령관의 발언은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 황주로에서 조만간 군용기 시험비행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임.

■ NYT, 中 남중국해 미사일 배치로 마중 물리적 충돌 위험 고조(2/17, 연합뉴스)

- 중국이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에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물리적 충돌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7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함.
- NYT에 따르면 중국이 파라셀 군도에 속한 우디 섬(중국명 용싱다오(<永興島>))에 최근 지대공 미사일 2개 포대를 배치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미국은 물론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베트남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음.
- 미사일 배치 소식은 공교롭게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들과 만난 16일에 폭스뉴스가 보도했으며, NYT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필요한 국토 방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주권국가의 자위권 행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미사일 배치로) 미국은 더 주의 깊게 사태를 대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 남중국해 미사일 배치…시진핑 비군사화 약속 파기 논란(2/18, 연합뉴스)

- 중국이 남중국해 시사(西沙·파라셀제도·베트남명 호양사) 군도에 미사일을 배치한 것을 두고 중국 최고지도자인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약속 위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음.
- 시 주석은 지난해 9월 25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중국은 난사(南沙·스프레틀리제도·베트남명 쩌엉사) 군도 해역을 군사화할 뜻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음.
- 이에 대해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해군 대장)은 17일 중국이 남중국해 해역의 군사기지화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도 시사군도에 미사일을 배치한 것은

당시 약속을 명백히 위배한 것이라고 비난했으며, 케리 장관도 “시 주석은 지난해 9월 방미 당시 오바마 대통령과 로즈가든에 서서 남중국해를 군사기지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이후 중국이 지속적으로 군사기지화를 추진해온 모든 증거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짐.

■ **中, 동풍-31 ICBM 발사장면 첫공개…남중국해·사드 압박(2/18, 연합뉴스)**

- 중국군이 이번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동풍(東風·DF)-31A의 발사 장면을 처음으로 공개함.
-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및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로 날을 세우고 있는 미국을 겨냥한 ‘무력시위’가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됨.
- 18일 홍콩 봉황망(鳳凰網) 등에 따르면, 관영 중국중앙(CC)TV는 최근 ‘군사 기록’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통해 로켓군이 동풍-31A를 실제로 발사하는 장면을 공개하였으며, 중국군기관지 해방군보(解放軍報)는 “이 미사일이 발사되는 장면이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게재함.

■ **中, 긴장 고조되면 남중국해 대함미사일 배치할 것(2/18, 연합뉴스)**

- 남중국해에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이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면 대함 미사일까지 배치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됨.
- 중국의 해군 전문가 리제(李杰)는 “현재로서는 공습이 가장 큰 위협이기 때문에 방공이 최우선”이라면서도 미국이 압박을 강화하면 중국이 남중국해 내 자체 방위 계획의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8일 보도함.
- 리 전문가는 “대함 미사일을 배치할지는 상황 변화 정도에 달려 있다.”며 “상황은 미국과 (영유권 주장) 권리가 없는 국가의 도발 수준과 우리 자체적인 필요에 달렸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짐.

■ **美대북제재법, 北무역 90% 차지 중소기업 겨냥…광물거래 타격받나(2/19, 연합뉴스)**

- 18일(현지시간) 발효된 미국의 초강력 대북제재법으로 북한과 거래가 가장 많은 중국 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 제재의 범위를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에 도움을 준 제3국의

-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북한의 광물 수출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북한과 거래해온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이 제재 대상에 들어가게 됨.
- 중국내 북한 거래 기업의 규모는 알려진 바 없지만 북한의 2014년 대외 교역액(76억1천만 달러) 가운데 90.2%(68억6천만 달러)를 대중교역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북한 거래기업의 절대다수가 중국 기업인 것으로 파악됨. 특히 이번 제재는 중국의 광물자원 확보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中, 美대북제재법 발효에 정세 격화하고…제3국 이익훼손(2/19,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북한만을 겨냥한 미국의 사상 첫 대북제재법이 발효된 데 대해 “정세를 격화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반대와 우려 입장을 피력함.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우리는 관련 보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현재 한반도 정세가 복잡하고 민감한 상황에서 유관 각방(관련국)이 모두 냉정과 절제를 유지하고 정세를 격화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음.
- 홍 대변인은 “중국은 그 어떤 ‘핫이슈’든지 간에 단순한 제재나 압력 부과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제3자의 이익에 해가 되는 그 어떤 행위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정세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고 주장함. 한편, 홍 대변인이 말한 제3자는 중국을 우회적으로 지칭한 것으로 해석됨.

■ **미국무부, 中 평화협정 논의 제안에 北비핵화가 최우선(2/19,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추진을 제안한데 대해 “북한의 비핵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일축함.
- 카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이날 이같이 답변하고,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평화적 방법으로 추진하기 위해 6자회담 관련국들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밝힘.
- 한편, 왕 부장은 지난 17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과 양자회담을 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반도(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동시에) 병행해 추진하는 협상방식을 제안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짐.

- **미국방부, 中, 파라셀 군도에서 과거에 미사일 훈련했다(2/20, 연합뉴스)**

 - 피터 쿡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과거에 파라셀 군도에서 중국이 동종의 장비와 관련한 훈련을 한 것을 확인했다.”며 “중국의 행동으로 이미 긴장이 높아진 지역 정세가 더 불안해질 뿐”이라고 언급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보도함.
 - 교도는 스콧 스위프트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이 18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강연에서 파라셀 군도의 우디 섬(중국명 용싱다오(<永興島>))에 지대공 미사일 홍치(紅旗·HQ)-9가 배치된 것이 이번이 최소 3번째이며 과거 두 차례는 훈련을 위한 것이었다는 언급을 했다고 군사뉴스 사이트를 인용해 전했다.
 - 또한, 과거 훈련은 무인기 격추 훈련이었으며 최근 알려진 미사일 배치를 위해 중국이 차근차근 준비한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통신은 평가함.

- **中, 남중국해 美함정 접근시 발포 충돌 불사해야…강경론 확대(2/20, 연합뉴스)**

 - 미국과 남중국해 갈등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서 인공섬에 접근해오는 미국 함정에 대한 발포, 또는 물리적 충돌도 각오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나오기 시작함.
 - 중국 온라인 관영매체 평파이(澎湃)와 봉황망(鳳凰網)은 20일 후보(胡波) 베이징대 해양연구원 연구원의 기고문을 통해 남중국해 긴장 고조에 따라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을 소개함.
 - 후 연구원은 중국은 남중국해에 두 가지 마지노선을 설정하고 미국에 이를 알려야 한다고 주장함. 하나는 어떤 이유로도 미국이 파라셀군도 해역을 침범치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 베트남명 쯔엉사군도) 주변에서 중국을 겨냥한 미 군함의 ‘유해통항’을 용납해선 안 된다는 것으로 전해짐.

- **中, 자국산 첨단전투기 ‘젠-16’ 비행 공개…美日 겨냥한 듯(2/21, 연합뉴스)**

 - 중국이 장거리 공격 능력을 갖춘 자국산 첨단 전투기 젠(殲)-16의 비행 장면과 한반도 유사시의 대비임무를 맡은 부대의 훈련 장면을 잇따라 공개함.
 - 관영 중국중앙(CC)TV 군사채널은 최근 춘제(春節·중국의 설)를 맞아 공군 기지를 찾아간 프로그램을 통해 젠-16의 비행장면을 공개했다고 홍콩 봉황망(鳳凰網)이 21일 보도하였음. 봉황망은 “CCTV가 젠-16의 복역(服役·군복무 또는 임무수행) 사실을 공개했다.”고 보도해 이미 실전에 배치됐거나 적어도

곧 실전에 배치될 가능성을 시사 함.

- 한편, 쟈-16은 중국선양(瀋陽)항공기공업집단이 수호이-27을 기초로 항공전자 성능을 더욱 향상시킨 3.5세대 전투기로, 미국의 F-15E 전투기와 기본 성능이 비슷하며 공중급유 능력이 있어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짐.

마. 미·일 관계

■ 美차관보, 2012년 日센카쿠 국유화 우려해 특사외교 주선(2/15, 연합뉴스)

- 일본이 중일 영유권 갈등지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를 2012년 국유화하자 미국 국무부 당국자가 이를 우려해 특사외교를 추진한 정황이 드러났음.
- 15일 교도통신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게이트’와 관련해 미국무부가 지난 13일 공개한 클린턴 이메일에서 이런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함. 일본이 센카쿠를 2012년 9월 11일 국유화한 지 약 3주 후인 10월 2일 커트 캠벨 당시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클린턴 장관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중·일간에 의도를 오해해서 생긴 심대한 리스크가 있고, 양측이 태도를 경직화하고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짐.
- 또한, “(쌍방의) 체면을 살리는 타개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전직 고위 관리들로 구성된 초당파 특사단을 2주 안에 양국에 파견하자고 제안하여, 10월 말 지일파인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副)장관과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전 미국 국방부 차관보) 등이 일본과 중국을 비공식 방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당시 일본 총리, 리커창(李克強) 당시 중국 부총리(현 총리)와 회동한 것으로 알려짐.

■ 日방위상 美태평양사령관 남중국해 중국 미사일 배치 비판(2/17, 연합뉴스)

-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과 일본을 방문 중인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해군대장)은 중국이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西沙>군도·베트남명 호양사 군도)에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한 것을 17일 비판한 것으로 알려짐.
- 교도통신에 따르면 나카타니 방위상은 도쿄에서 해리스 사령관과 회담하며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일방적인 행동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나카타니

방위상은 해리스 사령관에게 미군이 남중국해의 인공섬 주변에 함정을 파견한 이른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지지한다는 뜻도 함께 밝혔음.

- 이와 관련, 항행의 자유 작전의 책임자이기도 한 해리스 사령관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작년 9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남중국해를 군사 거점화하지 않는다고 발언할 것을 염두에 두고 “시 주석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했다고 전해짐.

■ **日야당, ‘오바마 노예 핏줄’ 발언 輿의원 사퇴결의안 제출(2/18, 연합뉴스)**

- 일본 민주당과 사민당, 생활당 등 야권은 1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대해 ‘노예 핏줄’이라는 폄하 발언을 한 집권 자민당의 마루야마 가즈야(丸山和也) 참의원의 의원직 사퇴권고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함.
- 그러나 마루야마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차별적 발언을 의도적으로 했다면 사퇴할 수도 있지만, 나는 경우가 다르다.”며 의원직 사퇴 불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짐.
- 한편, 마루야마 가즈야(丸山和也) 집권 자민당 참의원은 17일 “지금 미국은 흑인이 대통령이 됐다. 흑인의 핏줄을 잇는다. 이는 노예다.”고 언급해 파문을 일으켰음.

■ **日, 남중국해에 함선 더 파견하라 미국에 촉구(2/19, 연합뉴스)**

- 남중국해 일부 섬에 중국이 미사일을 배치한 것으로 드러나자 일본 정부는 남중국해 경계·감시 활동을 강화할 것을 미국 정부에 촉구했다고 니혼케이자이 신문(닛케이)이 19일 보도함.
- 최근 일본을 찾은 해리 해리스 미군 태평양사령관(해군 대장)은 지난 17일 일본 정부 당국자에게 “‘항행의 자유 작전’은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하자 일본 당국자는 “(미군) 함선 등의 파견 빈도를 늘리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닷케이는 전함.
- 한편, 항행의 자유 작전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조성한 인공섬 12해리(약 22km) 이내의 수역을 미군 함선이 항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미국은 작년 10월과 지난 1월 이 작전을 수행하였음.

바. 미·러 관계

■ 미국 F-15 전투기 편대 핀란드 첫 배치…러 위협 대응(2/16, 연합뉴스)

- 러시아의 군사 활동 확대에 대한 유럽 각국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이 F-15 전투기 편대를 처음으로 핀란드에 배치하기로 했음.
- 미국 공군은 F-15 전투기 여섯 기로 구성된 편대와 공군 병사 100여 명을 오는 5월 9~22일(이하 현지시간) 러시아 국경과 약 160km 떨어진 핀란드 쿠오피오에 배치하기로 했다고 미국 CNN방송이 15일 전함.
- 러시아와 약 1천300km 길이 국경을 공유하는 핀란드는 NATO 회원국이 아니며 미국 F-15 전투기가 배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이에 대해 미국 공군 관계자는 “미국이 이번 훈련을 요청했다.”며 “이 훈련은 대부분 노르웨이나 스웨덴 등 인접 국가에서 이뤄졌으며 핀란드에는 F-15를 훈련 차 배치한 적이 없었다.”고 확인하였음.

■ 마-러, 시리아 적대행위종식 형식 아직 합의 못해(2/21, 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전화로 시리아 문제를 논의했지만, 아직 휴전 형식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미 국무부가 20일(현지시간) 밝힘.
- 미국 국무부는 존 커비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적대행위의 종식 형식에 대한 합의가 아직 완전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케리 장관이 “이른 시일 안에 적대행위의 완전한 종식이 이뤄지길 희망했다.”고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케리 장관은 라브로프 장관에게 “계속되는 러시아 군항공기의 무차별 폭격과 그에 따른 인명 피해를 깊이 우려한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짐.
- 케리 장관과 라브로프 장관은 유엔이 지정한 시리아 내 지역에 대한 식량과 물, 의약품 전달에 대해 “전망이 좋다.”는 공통된 의견을 냈으며 “추가 지원이 즉각 이뤄져야 하고, 앞으로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방해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짐.

사. 중·일 관계

■ 중국, 일본의 호주 잠수함 수주 견제… 일본은 패전국(2/18, 연합뉴스)

- 일본이 총 43조원 규모의 호주 잠수함 건조 사업 수주를 위해 총력전을 펴는

가운데 중국이 세계 2차대전 패전국인 일본의 전쟁 역사를 고려하라며 일본의 수주를 견제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짐.

-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17일 베이징에서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과 연례 전략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패전국”이라며 “호주는 아시아인들의 감정을 참작해야 할 것”이라고 신랄하게 지적했다고 가디언 호주판 등이 18일 보도함. 왕 부장은 이어 이 같은 역사 탓에 일본이 평화헌법과 국내법에 따라 무기 수출이나 외국과의 군사협력에 매우 엄격한 제약을 받아왔으며 호주가 일본과의 군사협력 과정에서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이에 대해 비숍 장관은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요구하는 성능이나 기술, 비용 등을 충족하는 잠수함을 얻는 것”이라며 경쟁력 평가를 기초로 수주 업체를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함.

■ 日방위상, 中 남중국해 미사일에 필리핀·베트남과 공동대응(2/19, 연합뉴스)

-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19일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 <西沙>군도·베트남명 호양사 군도)에 중국이 지대공미사일을 배치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힘.
-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날 기자들에게 “공표된 화상 등으로 미뤄 지대공미사일로 보이는 장치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으며, 앞으로 일본의 대응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바다를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가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이와 관련, 나카타니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갈등이 있는) 필리핀, 베트남 등과 양자, 다자간 공동훈련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짐.

■ 日외무상 올봄 방중 계획 보류…북핵대응 갈등에 중일관계 삐걱(2/21, 연합뉴스)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올해 봄 중국을 방문하려던 구상을 보류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교도통신이 북수의 양국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21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외무상의 방문에 관해 중국 측이 “환경 정비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정 조율에 응하지 않을 생각을 일본 정부에 전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쯤 기시다 외무상이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는 견해가 양국 사이에 대두하고 있음.

- 중국 정부의 핵심 인물들과의 연결 고리가 있는 중일 관계 소식통은 중국이 기시다 외무상의 방문을 수용하지 않는 이유에 관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을) 너무 자극했다. 북한에 관한 대응에서도 (중국의) 체면에 상처를 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함.

아. 중·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자. 일·러 관계

■ 러일, 4월 도쿄서 외무장관 회담…아베 방러 조율(2/15, 연합뉴스)

- 일본과 러시아는 15일 도쿄에서 외무차관급 회의를 열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오는 5월 초 러시아 방문 일정 조율을 위해 오는 4월 도쿄에서 외무장관 회의를 열기로 합의함.
- 양측은 또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을 위해 긴밀히 연대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짐.
-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은 이날 회의에서 오는 5월 6일 러시아 소치에서 아베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타진하였음. 특히 양측은 정상회담 세부 일정 및 의제 조율을 위해 라브로프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4월 중순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과 회담을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 국제전략연구실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실상 및 대내외 동향

- “인도적 교류도 잠정중단 불가피”(2/17,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가운데 한국 정부는 17일 인도적 대북 지원도 현재로선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정치군사적 상황과 상관없이 인도적 지원은 지속한다는 원칙마저 재검토된 셈임.
 - 통일부는 “북한의 영유아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엄중한 상황”이 형성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 유엔 기구 등을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도 정 대변인은 “유엔의 대북제재 논의가 끝나면 유엔기구들도 그 방침에 따라서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그에 맞춰 검토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 한편, 남측 정부는 북한 당국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행위는 대북제재 차원에서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음.
 - 특히 중국 등에서 영업 중인 북한 식당을 남측 국민이 이용하지 말아달라는 게 당부 내용의 핵심임.
 - 정준희 대변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인해 매우 엄중한 상황이 됐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자금이 들어가는 여타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 “북 과학기술전당에도 장애인열람실”(2/17, 자유아시아방송)
 - 평양에 새로 문을 연 과학기술전당에 ‘장애인열람실’이 설치됐다고 최근 북한을 방문한 서방 관광객이 2월 17일 밝혔다.
 - 익명을 요구한 이 관광객은 문이 잠겨 있어 내부가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는 돌아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 이 관광객이 제공한 사진에는 랩탑이라고 불리는 소형컴퓨터 모양의 그림 옆에 ‘장애인열람실’이라고 적힌 낱말이 있는 입구가 있으며, 깔끔한 현대식 문 윗부분에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주체 104(2015)년 10월 27일 현지도하시신 장애인열람실’이라고 적힌 금테가 둘러진 빨간 네모 현판이

붙어 있음.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10월 28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과학기술전당 현지지도 소식을 보도하며 80년대 인민대학습당을 지은 김일성 수령처럼 김 제1위원장이 ‘인민에게 선물로 안겨준 최신과학기술보급거점’이라고 소개했음.
- 북한 장애인 연구를 하고 있는 미국 시라큐스 대학 버튼 블랫 연구소 (Burton Blatt Institute) 자넷 로드(Janet Lord) 박사는 이 같은 변화가 보여주기식 정책(window dressing)에 불과하다고 분석했음.
- 세계적인 장애인 인권법 전문가인 로드 박사는 북한이 2012년 런던 장애인 올림픽에 사상 처음 선수단을 파견하고 장애인 예술단의 해외 공연을 하는 한편 이처럼 평양의 공공건물에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근본적 정책 변화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음.
-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 발간 후 국제사회의 대북인권 개선 압박에 대해 정치적 영향이 덜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이끌어 내기 용이한 장애인 인권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 반면 북한 장애인 사업에 관여한 서방세계의 민간단체 관계자들은 북한의 장애인올림픽 참가와 장애인권리협약 서명에 이은 이 같은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한 장애인 인권 증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함.

■ 북한 돈줄 차단…다음 순서는 북한 해외노동자?(2/17, KBS)

- 2013년만 해도 북한 근로자가 파견된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 등 16개 나라 정도였지만, 이제는 50여 개국에 인원도 5만 8천 명에 달한다고 전해짐.
- 정보 당국은 북한이 해외노동자를 통해 한해 2억 5천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이 가운데 90% 가량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치품 구매 등에 쓰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정부는 인권 차원은 물론 북한의 돈줄 차단을 위해 노동력 해외 파견 문제를 주목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북한 노동자 파견을 차단하는 문제는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나라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해당 고용국들과 국제기구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음.
- 불가리아와 체코 등은 EU 회원국의 법적 의무를 들어 북한 노동자 고용을 중단한 바 있음.

■ “북, 탈북 막으려 국경부대 교체”(2/18,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당국이 최근 국경경비대를 교체하는 등 주민 탈북 방지에 안간힘을 쏟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함경북도 회령시 주민들과 연락하고 있는 중국의 소식통은 “함경북도 회령 일대에서 근무를 서던 국경경비대 초소의 군인들이 2월 초에 하루 밤사이에 다 바뀌었다”면서 “여단급 교체가 아니라 중대 단위로 전면 교체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 북한 국경경비대 27여단은 회령시와 무산군 일대의 국경 경비 임무를 맡은 부대로, 이 구간은 탈북자들의 주요 탈출통로로 이용되어 왔음.
-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은 국경경비대 군인들이 돈을 받고 주민들의 탈북을 돕는 비리관계를 끊기 위해 여단 예하 대대와 중대, 초소들을 수시로 바꿔왔음.
- 하지만, 이번 교체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따라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가 강력한 제재에 돌입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주목됨.
-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북자들을 데려오는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에 정착한 50대의 한 탈북자는 “북한 경비대 교방(교체)이 날이 갈수록 잦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 또 날이 갈수록 단속이 심해져 현재 탈북 도강비용을 일인당 1만 달러 이상 받겠다는 중개인도 있다고 그는 주장했음.
- 그는 “얼마 전 함경북도 대흥단 지구에 주둔했던 경비대 중위도 탈북을 돕다가 보위사령부에 체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그 중위는 북한에서 성분이 좋은 집안 출신인 데도 행방을 알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음.
- 한국 통일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2009년 2천 914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2015년 11월까지 집계된 탈북자는 1천88명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北, 청년동맹 조직부장 사망에도 ‘백두산 답사’ 강행”(2/19, 데일리NK)

- 북한 김정일 생일(2월 16일)을 맞아 최근 진행된 백두산 답사 행군에서 자동차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음.
- 사람이 죽은 사고가 났음에도 답사가 중지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소탄 실험성공 자축에만 초점이 맞춰져 간부들 속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소식통이 알려왔음.

- 북한 양강도 소식통은 2월 17일 “장군님(김정일) 생일인 2월 16일을 맞아 지난달 31일부터 중앙기관들의 백두산 답사가 시작됐다”면서 “답사대의 후방사업을 책임진 황해북도 여단 농구방(승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뒤집어져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 소식통은 이어 “이 사고로 황해북도 청년동맹 조직부장과 지도원이 사망했지만 답사는 계속됐다”면서 “답사대원 사이에서는 ‘멀쩡한 동료가 죽는 걸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의 마음 따위는 헤아리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위(중앙당)의 처사를 비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소식통에 따르면, 보름 동안 진행된 이번 백두산 답사행군은 김정일 생일보다는 북한이 김정은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수소탄 성공자축 분위기가 더 강했다.
- 소식통은 “지난 시기 백두산 답사 대원들의 배낭 뒤에는 ‘백두의 혁명정신, 총폭탄, 결사옹위’ 등의 구호들을 붙여 있었지만, 이번에는 전부 수소탄성공 관련 구호들만 있다”면서 “일부 젊은 간부들 속에서는 ‘수령님(김일성) 혁명사상을 배우러가는 것인지, 수소탄 축하하러 가는지 분간을 못하겠다’는 말도 나왔었다”고 말했다.

2. 북한인권

■ 박 “北주민 삶 결코 외면 안 해”…북한인권법·테러방지법 촉구(2/16, 이데일리)

- 박근혜 대통령은 2월 16일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간절하게 부탁드린 테러방지법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막기 위한 북한인권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정에 관한 연설’을 통해 “북한이 언제 어떻게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지 모르고 테러 등 다양한 형태의 위협에 국민들의 안전이 노출되어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 박 대통령은 북한인권법과 관련, “저와 정부는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만들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북녘 땅의 주민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 나갈 것”이라며 “잘못된 통치에 의해 고통 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테러방지법에 대해선 “국민들이 정치권에 권한을 위임한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 달라고 한 것이지 그 위험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아닌 것”이라며 “국민의 선택받으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국민의 소리를

꼭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거듭 당부했음.

■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김정은, 반인도 범죄 조사받을 수도”(2/16, MBC TV)

-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에 게 반인도적 범죄와 관련해 조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공식통보하라고 유엔에 요청했음.
- 특별보고관은 보고서를 통해 나치형태의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는 북한 고위 급인사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서, 여기에는 김정은 국방위원장도 포함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음.
- 보고서는 또 반인도적 범죄에 책임이 밝혀진다면 북한에 책임을 물을 법적 방법을 강구하고, 진실을 조사할 3명의 전문가가 임명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음.
- 다루스만 보고관은 진실규명을 위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북한인권문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위해서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중국은 그동안 북한 인권문제를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루는 것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온 바 있음.
- 그러나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중국이 새로 논의되고 있는 유엔의 대북제재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어 상황변화가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음.

■ “북 인권 책임 추궁 전문가단 구성해야”(2/17, 자유아시아방송)

-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2월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문가단 구성을 지지할 것을 촉구했음.
- 휴먼라이츠워치 등 13개 단체는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공동서한에서 다음 달 채택될 대북 인권결의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음.
-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피셔 제네바 국장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전문가단 설립을 통해 북한의 반 인도적 범죄 피해자를 지지하고 정의구현과 책임자 처벌을 끝까지 추구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단순히 북한 지도부가 자국민의 인권을 유린한다는 지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임.
- 휴먼라이츠워치는 전문가단이 설립되면 잔혹한 인권 유린 가해자에 대한 책

임 추구를 위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밝혔음.

- 앞서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9월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 같은 전문가단 구성을 촉구했음.
-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북한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구체적 조치에 대해 권고할 전문가단을 임명한다는 것임.
- 휴먼라이츠워치는 특히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압박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 리수용 외무상 참석 예정(2/17, 연합뉴스)

-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오는 2월 29일 개막되는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다음 달 1일 연설할 예정임.
- 유엔 인권이사회 관계자는 2월 17일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인권이사회 고위급 패널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연락을 해왔다”면서 “리 외무상은 지난해 인권이사회에도 참석한 바 있어 이번 회의에 참석하면 두 번째”라고 말했음.
- 리수용 외무상은 지난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가 탈북자들의 허위 증언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일방적 주장을 한 바 있음.
- 우리나라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오는 2월 29일 오전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지만, 아직 최종 확정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 우리나라는 지난해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이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패널 회의와 제네바 군축회의에 참석한 바 있음.
- 유엔 인권이사회는 다음 달 14일 열리는 각국 대표들의 상호대화 세션에서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북한인권 현황 구두보고를 듣고 북한인권 문제를 토론할 예정임.
- 이에 앞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지난 15일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에 제출한 서면 보고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반인도적 범죄와 관련해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북측에 통보할 것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공식 요청했음.

■ 경기도 북한이탈여성 인권의식 향상 사업 사업자 공모(2/17, 아주경제)

- 경기도는 ‘북한이탈여성 인권의식 향상 사업’을 운영할 사업자를 오는 2월 23일까지 모집함.
- ‘북한이탈여성 인권의식 향상사업’은 탈북 과정에서 얻은 심리적·육체적 고

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여성들에게 눈높이에 맞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및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인권기관 전문 상담원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진했음.

- 신청자격은 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운영 등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임.
-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면 북한이탈여성 인권의식 향상교육 전문 강사 양성 및 인식제고 워크숍, 도내 4개 하나센터별로 북한이탈여성 인권교육 실시, 성폭력상담소 등 현장방문 및 전문상담원 지정·지속 지원 등을 오는 12월까지 운영하게 됨.

■ 미 국무부 차관보, 북한정권 인권 침해 엄중 경고(2/20, 미국의소리)

-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 발표 2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북한인권 토론회가 2월 19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 열렸음.
- 미 국무부의 톰 말리노스키 민주주의·인권·노동담당 차관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COI 보고서가 북한인권 관련 논의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음.
-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과거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무시하던 북한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것도 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라고 말했음.
- 특히 북한 관리들에게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직접 물을 것이라고 계속 경고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세계의 정보를 보내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날 토론회에서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도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라디오 방송과 위성, 이동식 저장장치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세계의 정보를 보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임.
- 커비 전 위원장은 특히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이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 때를 대비해 인권 침해의 증거를 수집하고 기록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음.

■ **북한인권단체 COI 보고서 2주년 기념 국제대회(2/21, 세계일보)**

- 북한인권단체인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2월 22일 영국의 ‘북한인권을 위한 초당적 의원그룹(APPG)’과 함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2주년 기념 국제대회를 영국 런던에서 가짐.
- ICNK에 따르면 APPG는 ‘북한 내 여성폭력 문제’를 조명하는 국제대회를 열어 COI 보고서 발행 2주년을 기념하고 북한 내에서 자행되는 여성폭력과 차별 및 인신매매 문제를 조명할 예정임.
- ICNK 사무국 관계자는 “여성폭력 문제는 어떤 유엔 회원국가들도 거부할 수 없는 주제”라며 “이를 이슈화함으로써 책임소재 규명을 더 용이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음.
- ICNK는 증언자로 회령 전거리교화소 내 여성 수감동에 최초로 수감됐던 최민경 씨를 초청해 교화소 여성 수감동 건설공사에 강제 동원된 증언을 들을 계획임.
- 이들과 함께 최근 ‘다시 강철로 살아’라는 신간을 낸 북한민주화운동가인 김영환씨도 ICNK 초청으로 본 행사에서 북한 체제변화 시 인권문제 접근 방안과 전략을 제시할 예정임.
- 권은경 ICNK 사무국장은 “북한 여성인권문제는 정치범수용소나 공개처형 등과 같이 극단적이고 혐기적인 형태의 북한 특유의 인권유린들에 가려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여성폭력은 국제사회 어느 나라에서도 외면하기 어려운 이슈이므로 북한인권을 위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본 국제대회가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음.

3. 탈북자

■ **유럽 탈북민들, 북한 도발 규탄 시위 열어(2/17, 미국의소리)**

- 유럽의 탈북민들이 2월 15일부터 이틀간 네덜란드와 헤이그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시위와 전시회를 열었음.
- 재유럽조선인총연합회은보도자료에서 네덜란드체류조선망명자협회와 함께 2월 15일 네덜란드 헤이그와 1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각각 규탄 시위를 갖고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는 성명서와 인권 책자를 시민들에게 배포했다고 밝혔음.
- 단체들은 특히 헤이그 중심가인 중앙역 광장과 브뤼셀의 유럽의회 등지에서 북한 내 인권 참상을 폭로하는 사진 전시회도 열었다고 밝혔음.
- 단체들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강력한 대북제재결의안을 조속히 채택하고

북한 정권은 인권 유린과 착취를 사죄하고 핵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 정상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음.

■ 북 “탈북자, 한국에서 굶고 있다” 허위 선전(2/20,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탈북 방지를 위한 강연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의 언론 매체인 ‘아시아프레스’는 국가안전보위부가 2월 들어 북한 북부 지방에서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의 비참한 삶을 담은 영상을 보여주고 “일 자리를 얻지 못해 굶주리며 고생하고 있다”며 선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 ‘아시아프레스’는 “보위지도원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한국에 간 탈북자들이 일자리도 얻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음식을 주워 먹거나 굶어 죽기까지 한다’고 말했으며 ‘특히 탈북자들이 북한에 돌아가겠다고 해도 한국에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에 따르면, 북한에서 선전한 영상은 한국에서 고생하는 탈북자의 장면만을 악의적으로 편집했거나, 북한 내부에서 연출해 촬영했을 가능성을 언급했음.
- 그럼에도 강연 현장에는 선전 영상을 보고 눈물을 흘린 주민이 있는가 하면 보위부의 선전에 반발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이시마루 대표는 북한 당국의 강력한 단속에도 계속되는 탈북 행렬은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데 큰 도전이 되고 있다며 이처럼 북한 당국이 탈북 방지를 위한 선전에 나선 것은 북한 내부의 체제결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음.
- 한편, 북한 정권은 올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의 발사를 통해 주민 결속에 나서고 있지만, 북한 주민의 탈북 행렬은 계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1월에는 함경북도의 강안동에서 11명이 사라졌고, 같은 날 함경북도 무산군에서는 17명이 행방을 감추는 등 최근 국경연선의 도시에서는 가족을 동반한 탈북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북한당국은 최근 국경 경비대를 교체하면서 북한 주민의 탈북 방지에 안간힘을 쓰는 것으로 파악됐음.

4. 이산가족

- 특이동향 없음.

5. 납북자

- 특이동향 없음.

6. 국군포로

- 특이동향 없음.

7. 대북지원

- WHO ‘북한 내 지카 바이러스 발생 없어…예방 지원 계획’(2/18, 미국의소리)
 - 신생아의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 바이러스가 중남미와 아시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서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 없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다.
 - 세계보건기구의 더스샤라 이라즈 인드라나스 북한주재 대표는(Thushara Eraj Indranath, WHO representative to DPRK)는 “북한에는 바이러스 매개체인 이집트 숲 모기가 거의 없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하지만 바이러스가 북한에 유입됐을 경우에 대비해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 인드라나스 대표는 북한 보건 당국이 지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는 한편 현지 보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북제재법, 미 NGO 활동 영향 미미(2/19,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의 대북 지원단체들은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 (HR757)’의 시행에도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 지원활동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난 1월 하원을 통과한 원안에 있었던 인도주의 지원 활동에 대한 제한 조항이 삭제되거나 조정되었기 때문이라고 대북지원단체 관계자가 말했다.
 -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지원단체 중 하나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결핵을 비롯한 북한 주민을 위한 의료 지원을 위해 방북 신청을 한 상태라면서 북한 당국과 협의를 마치는 대로 지원단을 북한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 미국의 민간연구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NCNK)도 이번 주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개한 대북제재강화법 보고서에서 지원을 제한하던 조항들이 크게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 하원에서 채택한 원안은 북한으로의 외부 물자 반입 통제에 무게를 두면서 구호물자의 범위를 매우 좁게 규정했지만 최종안에는 구호물자에 대한 구제

적인 규정 조항이 삭제되었음.

- 이 같은 인도주의 지원 단체의 우려와 함께 미군유해 발굴 작업과 같이 미국 국방부가 북한에서 진행해야 할 사업도 제재강화법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유가족 단체의 탄원이 받아들여지면서 최종안에는 원안에 없던 면제 조항들이 추가되었음.
- 원안의 제재 면제 조항은 허가된 미국 정보활동과 비엔나 협정에 따른 유엔에서의 북한 대표부 활동과 관련한 금융 거래, 지정된 인도주의 활동 등 세 가지로 제한됐지만 최종안에는 미군유해발굴활동이 면제조항으로 첨가되었고 인도주의 지원 활동의 제한도 크게 완화되었음.

8. 북한동향

- 특이동향 없음.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